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2면	시도의회 의장협 미국 서부 출장 권혁열 도의장 등 17일까...	1
강원도민일보	22면	"강원 사회복지계 '따뜻한 공동체' 길잡이 역할 기대"	1
KBS 춘천		[집중취재] 의정비 인상 추진 잇따라...최고 14% 상승 가능...	2
江原日報	21면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충으로 지역공동체 구축"	4
CBS	온라인	강원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재정비, 투명성 확보"	5
江原日報	10면	민주평통 홍천 신년인사회	6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강릉시번영회 2024년 정기총회	7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최종수(평창) 도의원	7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7
江原日報	21면	[동정] 최종수 도의원(평창)	7
강원도민일보	06면	올해 강원도 창업지원 52억원 '전국 하위권'	8
江原日報	11면	기업도시~서원주역 2028년 4차로 확장	8
강원도민일보	11면	원주 인구증가 규모 10년 만에 1000명대 붐괴	9
강원도민일보	12면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착수 2027년 완공	9
강원도민일보	13면	동해 해군헬기장 소음문제 협의체 구성 난항	10
江原日報	10면	홍천 인구 5년간 2,640명 줄었다	1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접경지 군사적 긴장 해소해야	1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김 지사 도민 기대치 분발해야	12
江原日報	19면	[사설] 최규하 전 대통령 선양, '통합 사회' 만드는 계기로	13
江原日報	19면	[사설] 도내 대학가 취업 한파, 양질의 일자리 늘려야	14

강원도민일보

2024 01 10 ()

02

시도의회의회장협 미국 서부 출장

권혁열 도의장 등 17일까지 일정

권혁열(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5곳 시·도의회 의장이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 3개 도시를 방문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는 지난 8일부터 미국 서부 3개 도시에 방문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나섰다.



오는 17일까지 총 7박 10일 간의 일정이다. 제주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제외한 전국 15곳 시·도의회 의장과 수행직원 등 35명이 참여했다. 의장협은 9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 방문한 뒤, 샌프란시스코 강원도민회 임원과 환담을 갖고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도 찾는다.

이설화

2024 01 10 ()

22

강원도민일보

“강원 사회복지계 ‘따뜻한 공동체’ 길잡이 역할 기대”

춘천시 도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
도내 18개 시·군 기관 임직원 참석
김진태 도지사 등 축전 보내 격려

강원 사회복지계가 새해를 맞아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홍기중)는 9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2024 도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홍기중 도사회복지협의회장과 송정부 전 협의회장, 진영호 도사회복지사협회장, 안정희 도여성단체협의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기영·양숙희 도의원 등과 도내 18개 시·군 사회복지 기관 임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아동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여성 등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가 9일 세종호텔에서 홍기중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관련기관 단체장, 도 사회복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인들은 이날 “각 분야의 사회복지현장 특성을 이해하며 도민 복지 향상에 힘쓰자”고 다짐했다.

홍기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생하며 힘든

과정을 이겨내준 동료 분들과 종사자 등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사업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올해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영호 회장은 “강원지역 복지계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앞으로도 실무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중석 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는 도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기관이다. 도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한다”며 “올해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마음을 나누는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했다. 유계식 회장은 “사회복지현장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도내 종사자 한 분도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태 도지사과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허영·한기호·노용호 국회의원들은 영상 메시지와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김지사는 “건축재정상황에도 복지예산을 올린 만큼 더 나은 강원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주영 juyo9642@kado.net

[집중취재] 의정비 인상 추진 잇따라...최고 14% 상승 가능



[앵커]

강원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어 시군의회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9일) 이 문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지방의원들이 지금 얼마를 받고 있고, 앞으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고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부터, 강릉시와 춘천시까지 잇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지방의원의 연봉인 '의정비'의 인상 여부를 심의하는 조직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됩니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이 가운데 '월정수당'만 올려왔습니다.

이 수당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활동비'는 법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이미 그 상한선을 꽉 채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활동비 상한선이 확 올랐습니다.

도의원의 상한선은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시군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방의회에서 일제히 의정비 인상에 나선 겁니다.

[김기홍/강원도의회 부의장 : "물가나 교통비, 아니면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현재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활동비'를 상한선까지 올릴 경우, 연간 의정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강원도의원 의정비는 지난해(2023) 5,517만 원에서 올해 5,5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인 1.7%만큼 '수당'을 인상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다시 '활동비'까지 올리면 도의원 의정비는 지난해 5,517만 원에서 올해 6,180만 원이 됩니다.

1년만에 연봉이 600만 원 넘게 오르는 셈입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12%에 달합니다.

시군의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은 각각 4,000만 원대 초중반에서 4,000만 원대 중후반으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철원 같은 일부 군 단위 지역은 3,000만 원대에서 4,000만 원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 인상률은 14%에 달합니다.

[배혜민/속초시 중앙동 : "한꺼번에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아직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강원도 내 지방의회는 올해 의정비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다음 달 말까지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최중호·최진호

고순정 flyhigh@kbs.co.kr

“참참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충으로 지역공동체 구축”

도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 ... 각계 단체장 등 참석

“참참하고 두터운 약자를 위한 복지를 확충해 사회혁신과 가치 창출에 기반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9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2024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인들은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도내 사회복지가 더욱 확충되고 더 높이 비상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신년 인사를 시작으로 신년 덕담, 가수 훈남스의 축하공연, 축하케이크 커팅, 새해인사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홍기종 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올해도 사회복지 현장

에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교육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회복지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 올해는 전년보다 더 좋은 한 해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강원일보사 사회복지법인 함께사는 강원세상이 올해로 설립 21년을 맞았고, 연말에는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소외된 분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며 “강원일보사는 사회복지인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가 9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홍기종 도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유계식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거자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잦다. 일선 현장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올해 한 분도 다치지 않고 스트레스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정부 전 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우리는 남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 고생해 온 사회복지인이다. 앞으로도 계속 강원도 사회복지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양숙희 도의원, 진영호 도사회복지협의회장, 안정희 도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희기자 mini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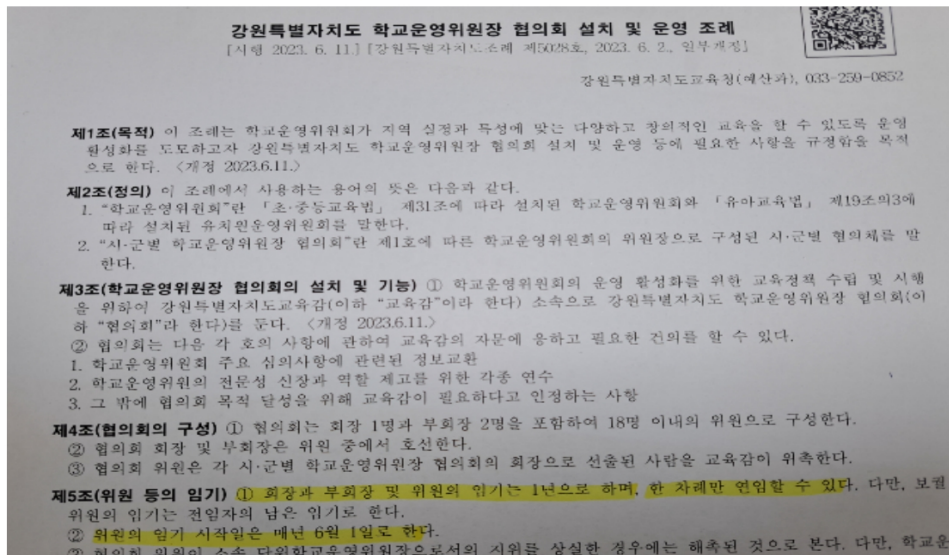
2024 01 09 ()

CBS

강원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재정비, 투명성 확보"

강원CBS 진유정 기자
핵심요약

강원CBS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무자격 임원, 회계관리 부실' 연속 보도 관련
강원도교육청 감사 착수 '부실 운영 확인' 담당 공무원 및 16개 지역교육청 주의 처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 '무한 임기' 1년 임기 및 연임 1번 제한
각종 (해외)연수, 교육봉사관련 사업 등 논란 사안 조례 폐지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강원도교육청 제공강원CBS가 지난해 연속 보도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위협의회) 임원 자격 및 회계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대대적인 재정비를 통한 투명성 확보에 나서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9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임원들이 '무자격' 상태에서 임원 임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도교육청 예산을 집행했다는 강원CBS 보도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 도내 16곳 지역 교육청에서 방치돼 온 부실 운영 문제를 확인하고 주의처분을 내렸다.

당시 학운위협의회를 담당했던 실무자에게도 임원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운영 업무를 부적절하게 실행했다며 주의 처분했다.

관련 조례도 전면 개정됐다. 가장 논란이 된 임원 임기와 연임 횟수, 임기 시작일 등을 명시해 무자격 임원들이 장기간 임원직을 독점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 2018년 제정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제 4조(임기)를 지난해 개정해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조례 2조(사업) 항목에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연수, 교육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등도 삭제해 부당한 예산 지출을 원천 차단했다.

강원CBS는 지난해 연속 취재, 보도를 통해 학운위협의회 일부 지역위원들이 특정 학교 운영위원장 임기가 끝나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위원장 직을 일시 상실해 결격 사유가 생겼지만 학운위 임원 지위는 유지돼 온 사례를 확인했다.

강원도 학운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임기) '위원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에 배치되는 사안이었다.

부당한 예산 지출 실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도교육청 자료 분석 결과 2019년 학운위협의회 임원 절반 가량이 무자격 임원 신분에서 강원도 교육청은 그해 12월 16일부터 24일 까지 '다함께 강원교육연구회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외연수' 명목으로 학운위 임원 8명을 공무원 3명과 함께 독일과 이탈리아로 국외 연수를 진행했다.

1인당 약 420만원, 총 4천여만원 예산 일부를 '무자격 임원'에게 부당 지출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무자격 임원들이 포함된 학운위협의회에 각종 회의와 세미나 등으로 지출된 예산도 적지 않았다. 2020~2022년 3년 간 강원도교육청이 무자격 임원들이 포함된 학운위협의회에 지원한 예산은 2020년 875만원, 2021년 190여만원, 2022년 258만원으로 약 1300여만원에 달한다. 학운위협의회는 식비, 숙박비 등으로 이 예산을 사용했다.

학운위협의회 개정 조례를 발의한 김희철 강원도의회의원(교육위)은 "학운위협의회는 학교와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활동하는 단체여야 하며 그 어떤 조건과 필요 이상의 혜택은 없어야 한다. 아이들을 볼모로 과거 벌어졌던 지역 유착 등 학운위의 만행을 반성하고 새로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중심이 돼 투명하고 건실한 협의회로 탈바꿈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원CBS 진유정 기자

江原日報

2024 01 10 ()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회장:오인철)는 9일 홍천 K컨벤션웨딩홀에서 '2024 갑진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유공 자문위원 시상,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영상 시청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민주평통 홍천 신년인사회

【홍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가 '2024 갑진년 신년인사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홍천군협의회는 9일 홍천 K컨벤션웨딩홀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유공 자문위원 시상,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영상 시청, 협의회 활동영상 상영, 신년기념 떡 절단식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홍성기 도의원, 김광수·용준식·황경화 군의원, 김성운 홍천경찰서장, 민철홍 홍천교육장, 전명준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춘천지역협의회장, 박주선 홍천문화원장, 전성열 NH농협 홍천군지부장,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유영곤 한국자유총연맹 홍천지회장, 한종원 강원일보 홍천지사장 등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하위윤기자

2024 01 09 ()

江原日報

[포토뉴스]강릉시번영회 2024년 정기총회



강릉시번영회 2024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가 지난 8일 세인트컨벤션웨딩에서 최종봉 회장, 최승순 도의원을 비롯,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10 ()



15
최종수(평창) 도의원은 10일 오후 2시 평창군 대

관령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전시프로그램 개막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10 ()



17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0일 오후 5시 30분 속초

시영랑동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영랑동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4 01 10 ()



21
◇최종수도의원(평창)은 10일 오후 2시 평창군 대관령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전시프로그램 개막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올해 강원도 창업지원 52억원 '전국 하위권'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 공고
총 3조7121억원 중 3.5% 차지
17개 시도 중 14위 서울시 1위

강원특별자치도의창업지원이매년증
가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 규모
는 전국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2024년 중
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
원사업이 포함됐고,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원으로 전년(3조6607억원)대

비 514억원(1.4%) 증가했다. 이는 창
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2022년 예산(3조6668억원)보다 453
억원(1.2%)이 더 많은 규모다.

지자체별로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 창업지원사업현황은 7개 기
관, 16개 사업으로 총 52억원(3.5%)을
지원한다. 본지 취재결과 강원지역의
경우 지자체 창업지원 예산이 2022년
(38억4000만원), 2023년(46억3000
만원) 등 증가세에 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2.31% 확대됐다.

최근 지원 예산이 증가세에 있지만
시도별 규모로 보면 미약한 수준이다.
올해 강원 지원예산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가
385억원(25.5%)으로 가장 많은 예산
을 지원하고, 중앙부처별로는 창업기
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수 37개(43%), 예산 3조4038억
원(95.6%)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 주요 창업지원 중 예
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
는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팀스프로그래밍으로,
전년대비 933억원이 늘었다. 특히 지
역창업은 전국 권역별로 지역 기반 혁
신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특
화사업 및 인프라 조성사업 등을 지원

해 강원지역 창업 환경이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
어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 '메이커 스페
이스'를 운영해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211억원), 지역별 창업 허브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간, 투자자간 네트워킹, 투자설명회 등
도 363억7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통합공고를 통해
창업기업에게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
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힘
쓸 뿐만 아니라,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우

2024 01 10 ()

江原日報

11

기업도시~서원주역
2028년 4차로 확장

주한미군 공여 주변 지원 선정 국비 225억 확보
이달 중 감정평가... 다음 달부터 토지보상 협의

【원주】속보=원주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교통편의
이 증대된다.

원주시는 서부권역 광역교
통망 구축사업이 주한미군 공
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본
보 지난 8일자 2면 보도)에 신
규 반영되면서 기업도시와의
도로 연계성이 한층 개선될 전
망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정
면 기업도시 남측부터 국지도
88호선과 접하는 구간까지 총
연장 1.12km 길이의 기존 2차
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
다. 또 가곡소하천 정비(1.0km)
와 서원주역에서 동화리를 연
결하는 교량 1개(0.15km)도 신
설된다. 완공될 경우 기업도시
부터 서원주역을 연결하는 교
통망이 4차선으로 확장, 시민
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 구간은 당초 총 사업비
450억원을 전액 시비로 추진
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으로 분류됐었지만 지난 연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규사업에 최종 선
정되면서 국비 225억원을 확
보, 시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시는 이달 중 편입용지에 대
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등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사업은
서부권역(기업도시~서원주역)
과 남부권역(서원주역~동화산
업단지)을 연결하는 4차선 광
역교통망 구축으로, 향후 도로
이용 편의이 크게 증대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1 10 ()

11

원주 인구증가 규모 10년 만에 1000명대 붕괴

작년 696명 그쳐 증가세 주춤
최근 9년간 최대 5000명대 '대조'
시, 첨단산업 육성 인구정책 주력

장기간 가파른 속도를 보이던 원주인
구 증가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

원주인구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8년 9개월간 한차례
끊김 없이 지속 증가해 왔다. 월평균

290여명의 증가세다. 그러나 2023년
들어 3월(-181명), 6월(-159명) 등
두차례나 감소하며 원주인구 증가세
에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이 같은 인
구증가 주춤세는 연간 인구증가 규모
를 통해 여실히 나타났다.

연간 원주 인구 증가 규모는 2014
년 2455명, 2015년 5703명, 2016년
3057명, 2017년 5285명, 2018년
2733명, 2019년 5145명, 2020년
5161명, 2021년 3381명, 2022년

3050명 등 최근 9년간 매년 최소
2000명대 중반에서 최대 5000명대
후반까지 가파른 속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2023년에는 두차례의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이며 한해 동안 인구증
가 규모가 696명에 그쳤다. 이는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던 2015년과 비교
하면 약 88%, 전년도와 대비해서도
약 77% 크게 감소한 규모다. 한해 인
구증가 규모가 1000명대 밑으로 떨어
진 것 역시 지난 2013년(952명) 이

후 10년만이다.

2023년 상반기(1~6월) 단 64명 증
가에 그쳤으나 다행히 하반기(7~12
월) 632명으로 약 10배 늘며 회복 조
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원주시
는 혁신·기업도시라는 그간 인구증
가를 주도한 동력을 이어갈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동시
에 인구 규모·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
운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증가세를 이
여갈 방침이다.

정태욱

강원도민일보

2024 01 10 ()

12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착수 2027년 완공

교통 7공원 일대 450억원 투입
지하 1층·지상 3층 400석 규모
도심 위치 교통 접근성 등 호평

국립국악원 강원분원의 위치가 강릉
시 교통 7공원 일대로 최종 확정돼 사
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립국악원은 지난해 연말 국립국
악원 강원분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구역 최종 보고회에서 분원설립
의 위치를 확정 짓고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국악원 강원분원
은 흥례동 산 121-8 일대 부지 면적
6117㎡에 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조
성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400석 규모
의 공연장을 조성할 국악원은 오는
2027년 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시설 내부에는 공연장과 교육장,

국악관련 체험 시설 등이 들어선다.

국립국악원은 올해 사업비 5억원
을 들여 실시시설계를 비롯해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다. 앞서 국악원은 분원의 위치를 교
동 7공원 롯데 시그니처 아파트와 오
죽현 한옥마을 인근 등 3곳을 검토한
뒤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교통 7공
원 내로 낙점했다.

시유지이면서 도심지 내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 편의성 등에서 좋은 평

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분
원은 남원과 진도, 부산에 이어 네번
째며 분원이 개원되면 대규모 국악공
연 등 전통문화 행사의 공간으로 자
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국악원 관계자는 "강원분원
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지에 터를 잡게 됐다"
며 "국악의 진흥과 전승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홍성배

강원도민일보

2024 01 10 ()

13

동해 해군헬기장 소음문제 협의체 구성 난항

해군 “지난달 주민동의 얻지 못해”
변영희 “조성 자체 원천 반대”
시의회 “민관군 협의체 선행”

동해 해상 작전능력 개선을 위한 동해시 송정 해군작전헬기장 조성사업이 올해 하반기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비행 소음 발생 문제를 논의할 민·관·군 상설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해군은 올해 사업 예산으로 52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동해해상작전능력보강시설사업’의 설계·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일괄입찰을 올해 초에 공고하고, 설계가 끝나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군은 1함대 낙산대 체력단련장 옆 해안가 4만6000여㎡ 부지에 600여억원을 들여 늦어도 오는 2027년까지 해상작전헬기장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해군은 지난해 11월 시의회를 방문,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상작전헬기장 도입과 관련, 군 입장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공사 입찰공고에 앞서 객관적인 비행 소음측정을 위한 민·관·군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해군은 지난달 대상 부지 인근 송정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접촉, 소음 측정, 주민설명회,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참여 여부를 타진했으나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시의회와 협의한 소음 측정과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장 참여를 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늦어도 2027년까지 완공하려면 더 이상 늦출 순 없기 때문에 입찰공고 준비와 소음측정·협의체구성 작업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일정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하지 않고 사전에 시·시의회와 주민들께 설명하고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주민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소음 측정 시

물레이션을 하자는 의견이 많아 해군측과 입찰공고 등 집행을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 중 해군측과 추가 협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민 송정동변영희장은 “주민들을 쾌적한 곳으로 이주시켜 놓기 전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헬기장 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해 협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나 소음측정 등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음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 표명 외에는 현재 무대응하고 있지만, 입찰공고 등 실질적 집행이 이뤄질 경우 물리적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

江原日報

2024 01 10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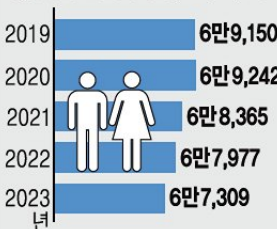
홍천 인구 5년간 2,640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6만7,309명’
2021년부터 3년째 감소세
홍천읍 5년 새 1,950명 줄어
군 “기반시설 조성 등 노력”

【홍천】홍천의 인구가 또 줄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로 5년 전보다는 2,640명이 나 급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홍천군의 지난해 12월 인구는 6만7,309명으로 집계됐다. 홍천 인구는 12월 기준으로 2018년

홍천군 5년간 인구 추이(명)



6만9,949명, 2019년 6만9,150명, 2020년 6만9,242명, 2021년 6만8,365명, 2022년 6만7,977명 등으로 감소 폭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2018년보다는 홍천 1개 면지역 인구보다 많

은 2,640명이 줄었다.

이 중 홍천읍의 지난해 인구가 3만3,655명으로 5년 새 1,950명이나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구가 밀집한 홍천읍의 타지로의 인구 유출이 전체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화촌면(-395명), 남면(-311명), 내면(-242명), 서석면(-199명), 서면(-95명), 두촌면(-15명) 등도 인구가 감소했다. 반면 홍천읍 또는 타 지역과 인접한 영귀미면(320명), 북방면(220명), 내촌면(28명) 등은 늘었다.

홍천군은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초고령화사회, 저출산지역인 만큼 인구감소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군은 정주여건 확충, 생활인프라 확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 인구소멸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북방농공단지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인구 유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1 10 ()

/ 19

접경지 군사적 긴장 해소해야

-북서해 포사격 군사 합의무력화, 주민 불안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인 NLL 상으로 포사격을 감행하면서 9·19군사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도내 접경지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북측의 도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사지역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거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관광지를 끼고 있는 지역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정부와 군사 당국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이뤄진 후 1년 1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최근 9·19군사합의를 3600회 위반, 군도 더 이상 해상 적대행위 중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북 양측이 군사 합의 무력화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접경지역 군사적 안전장치가 해제된 셈입니다.

9·19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에서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NLL 일

대의 일정 구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각각 5km, 총 10km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이 지키지 않고 해상 사격을 진행, 합의에 따른 완충지대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당면한 우려는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과 경기 위축입니다.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2022년 11월 북한의 동해상탄도미사일 발사로 생계 위협까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강원도내 접경지역 안보 관광시설이 폐쇄돼 고성 통일전망대와 철원 민통선 내 DMZ 생태평화공원도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긴장 상황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민 바람입니다. 행여 동해안이나 중동부 전선에서 북의 도발이 감행된다면 안전한 일상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상시 평화를 유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접경지역 경기가 더 이상 침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에 따른 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긴장 완화가 전제돼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10 ()

/ 19

김 지사 도민 기대치 분발해야

-직무수행 평가여론 고려해 변화발전 체감하도록

김진태 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여론이 싸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매년 상하반기 발표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평가 여론조사 결과 김지사는 상반기에 긍정평가 최하위였고, 이번 하반기에 한단계 올라서긴 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철도 침수참사와 제천 산불 술자리 논란 등으로 못매를 맞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하위였고 그다음이 김지사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김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2%, 부정평가 38%였습니다. 전국 평균 시도지사 직무수행 긍정률 51%이고 부정률 29%에 비하면 저조한 수치입니다. 단순히 타시도와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긴 하나 상위권인 경북지사, 전남지사, 경기지사 긍정률이 60% 내외인 것에 비하면 강원도민이 도정에 신뢰감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번 민선 8기 시도지사 직무평가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이며 17개 시도별 $\pm 1.3 \sim 7.9\%$ 로 신뢰할 만하기에 강원의 오늘과 미래 향방에 바람직한 추진력이 실릴지 더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 60대 이상에서만 절반 넘게 김지사 직무수행에 긍정 평가를 보냈고, 18세부터 50대 이하 청년층 및 중장년층 긍정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대 이상에서는 64%가 긍정평가한 반면 40대에서는 64%가 부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김지사 취임 직후 불거진 레고랜드 보증채무 미이행 선언 사태가 일단락됐을 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세계산림엑스포가 열리는 등 굵직한 이슈가 등장했는데 도도민 10명 중 4명 정도만 긍정하는 정도라면 지역사회 및 공직 내부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지사는 임기 초반에 연거푸 직무평가에 호의지 않은 도민 여론 및 부정평가를 긍정평가로 눈에 띄게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대 도정에서 긍정률 60%대를 비롯해 대개는 50%를 넘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갤럽 측은 응답자들이 시도지사 평가에 대해 덜 정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선호정당을 떠나 지사의 직무성과 자체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밀고 여론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김지사는 검사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처음으로 도정의 지방자치 책무를 맡아 기대와 불안이 엇갈리는데 우려로 기울지 않도록 분발해야 합니다. 도민은 역대 도정 및 타시도 시정 뉴스를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4 01 10 ()

/ 19

최규하 전 대통령 선양, '통합 사회' 만드는 계기로

고(故) 최규하(1919~2006년) 전 대통령이 원주시내 최대 알토란 지역으로 꼽히는 강원특별자치도 옛 종축장 부지 일부를 강원도에 회사(喜捨)한 것으로 확인돼 감동을 주고 있다. 최 전 대통령을 다시 평가하고 선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주목된다. 세상만사를 꿰뚫는 상식은 잘한 자는 칭찬받고, 잘못된 자는 질책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는 올바른 평가다. 일도양단식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최 전 대통령은 “강원도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종축장이 필요하다”는 당시 함경한강강원도지사의 요청에 1만여평에 달하는 집안의 선영을 단돈 15원에 강원도에 매각했다. 사실상 회사한 것이다. 최 전 대통령

이 15원에 매각한 반곡동 부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1㎡당 281만6,000원으로, 공시지가로만 총 972억원에 이른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강원도는 1970년대 원주 반곡동 일원에 23만여㎡ 규모의 대단위 종축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최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부지(3만4,522㎡)를 매입했다. 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축산업을 일으키는 물꼬를 터 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 전 대통령의 토지 회사 결정은 작게는 지도자의 고향 사랑에서 출발했을 것이고 크게는 나라 발전이라는 집념의 결과라고 본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10대 대통령으로 1975

년부터 국무총리로 재직하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해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전두환 등 신군부의 압력으로 8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역대 모든 한국 대통령에겐 공과가 있다. 최 전 대통령에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10·26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유신헌법에 따라 긴급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두환 중앙정보부서리 겸직 인정, 5·18 언급 회피 등으로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군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여기서 대통령 권한을 발휘하는 순간 또 다시 반란이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제 최 전 대통령의 재조명으로 잘된 부분은 더욱 선양해 나가야 한다. 최 전 대통령처럼 사심을 버리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고향 사랑의 실천 공적을 보인 지도자는 드물다. 특히 고향인 강원도 발전을 위해 토지를 기꺼이 내어준 최 전 대통령의 향토애는 영원히 기억돼야 한다. 우리는 이제 혼란을 이겨내고 상처를 서로 치유하며 공과를 제대로 평가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뤘다. 최 전 대통령의 선양사업이 통합과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원주 1만평 토지, 종축장 부지로 회사

고향 사랑 몸으로 실천하는 '지도자의 리더십'

功過 올바르게 평가, 잘된 부분은 후세에 알려야

江原日報

2024 01 10 ()

/ 19

도내 대학가 취업 한파, 양질의 일자리 늘려야

도내 대학가에 취업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좀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기뻐이나 높았던 취업의 벽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에도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20대는 전국적으로 74만명에 이른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 5명 중 1명이 20대 청년이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도 없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도 적지 않다.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기보다 구직 활동도 않고 그냥 쉬다는 청년은 41만명까지 불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115만명을 넘어선 셈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 4년제 대학생들이 전망하는 올해 졸업생의 예상 취업률은 49.7%에 그쳤다. 취업 환경이 전년도보다 어렵다는 응답도 30.3%에 달했다. 안정적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는 지난해 10월에도 7만7,000명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3년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31개 사(55.0%)가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

하지 못했거나(49.7%) 투자계획이 없다(5.3%)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대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45.0%)을 대상으로 투자 규모를 묻는 설문에서는 과반(61.0%)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취업 환경이 지난해보다 어렵다는 응답도 30.3%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취업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취업 관문을 뚫기도 갈수록 힘들다 보니 대학가에서는 아예 졸업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최소 학점을 등록하면서 졸업예정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에는 직업의 종류와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여러 직군이 활성화되고 있다. 고학력층이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지만 살아남기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취업 대신 창업에 눈을 돌리기도 하지만 성공하기 쉽지 않아 대부분 안정적인 취업 전까지 거의 임시로 거처가는 개념인 경우도 많다. 고학력층의 취업 목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업,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다. 좋은 직장을 늘리지 않는 한 취업 한파는 해소할 수 없다.